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6.04.16.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하여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판매, 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

2025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계획

금융감독원 2026.04.20.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또한, '09년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2만 4천 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2026.04.2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77개사)를 대상으로 '25.9월 도입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이행현황을 점검('26.1월말 기준)한 결과 금융회사 대부분이 동 모범관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2026.04.26.

금융감독원은 '26.4.23.(목)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금일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일 위원회의 자문...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다발지역 음성안내 서비스, 4월 전국 100개 지역, 3개 내비게이션 앱으로 확대합니다

금융감독원 2026.04.27.

(추진배경)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 홍보의 일환으

로,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하여 내비게이션 앱(App)으로 음성안내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음('25.7월). 이후 고의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26.4월). (주요내용) ①고의...

해수부·금융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우리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 합쳐 -선사 보험료 부담 경감...

금융위원회 2026.04.14.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덕원)는 4월 14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

아직 미흡한 동네 병·의원에서의 스마트폰 실손보험금 청구('실손24')도 빨리 확대되도록, 다양한 개선책을...

금융위원회 2026.04.15.

'26.4.15일(수), 금융위원회는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험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였다. < 청구전산화 현황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4.10.25일...

중동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 이덕원 금융위원장, 제5차 생산적...

금융위원회 2026.04.16.

금융위·금감원은 2026년 4월 16일 이덕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민간 연구원 및 전문가들과 중동상황이 산업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짚어보고...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 2026.04.17.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KBS)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여 자동차보험료...

금융위원회 2026.04.27.

'26.4.27일(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엄중히 유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논의 : 소득(기준중위소득 등) vs 지출(최저생계

보건복지부 2026.04.17.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4월 17일(금)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공공부조의 선정기준’과 관련해 ‘소득 vs 지출’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

치료재료 환율기준 개선하여 원가상승 부담 낮춘다

보건복지부 2026.04.21.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6개월...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2026.04.2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3일(목)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2026.04.2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을 강화하고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6.04.13.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의 실질적 취지와 목적보다는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 데 그쳐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2026.04.15.

최근 금융상품의 다양화·복잡화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단체 조직·활동 권리를 규정하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미흡해 단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 2026.04.16.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임산물·수산물·가축 및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건조·폭염·호우 등 이상기후가 상시화되며 피해가 대형화·복잡화되고, 품질 저하로 인한 소득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재해 범위의 모호성으로 보상 축소와 분쟁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 2026.04.23.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인력·시설 및 인증방법 기준 준수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럼에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유출 등 보안사고가 지속되고 예방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임. 이에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 2026.04.24.

현행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신탁원부의 등기기록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위탁자 부담 약정을 기재해 수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그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대법원 2022다233164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신탁...